

예방접종 전면중단,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(한민호 회장)

“신중히 책임있게 실시하자”

한민호 회장
양돈수의사회

무슨 일을 하든 목적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.

예방주사 전면중단은 돈 콜레라 근절과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것인데 -분명히 하긴 해야 하는데-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.

첫째; 중단후 발병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것이다.

1. 보상금이 필요하고, 2. 소각, 매몰할 장소가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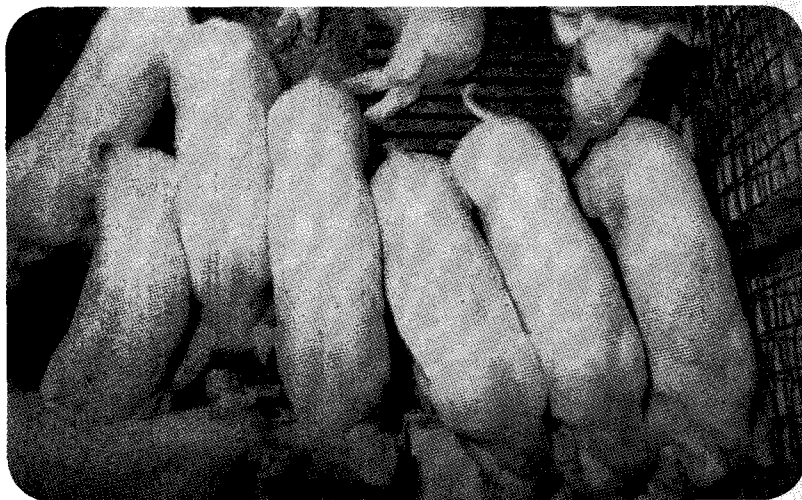
정부나 협회에서 강력히 중단추진을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? 재원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, 집단, 지역이기주의로 지자체 실시이후 -특히- 파문을 장소선정에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.

용인지역에서 콜레라가 발병되었을 때 불과 1,500여두를 묻는데도 2주나 걸렸다. 이유는 간단하다 “당신들 병들은

돼지를 왜 남의 땅에 묻느냐”다. 설득하고, 합의를 보는데 그런 시간이 걸렸다. 전면중단 이후 대대적으로 발병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 하겠느냐다. 법의 장치가 없이 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또 다시 겪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.

콜레라 병을 앓고 있거나, 보균하고 있는 돼지를 2주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다는데 -전염될 것을 우린 뻔히 알면서도- 어쩔수가 없었다.

법정전염병으로 피땀흘려 만들어 놓은 터전에서 물러나는 양돈인들에게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, 소각, 매몰할수 있는 장소를 관계 공무원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는한 중단후, 발병 이후의 문제를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결론이다.



◀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.

선포함과 동시에 -콜레라가 한번 정도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- 이후 동시에 청정국으로 선포하려는 마음일꺼다.

그렇게 됐음 좋겠다. 나도 양돈과 더불어 현재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으

니까. 그러나 확실히 하자, 도축장에서 2000-3000원/두 정도 목적세금을 붙여서 자조금을 확보하자. 그런 다음 정부 관계기관에 “우리가 이만큼 모았으니 지원좀 해 주시요” 해서 튼튼한 자조금을 확보해 피해농가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되어야 가능하다.

또한 소각, 매몰하는 것도 법적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안되게끔 마련해야 할 수 있다. 아니면 공무원이 집단, 지역이기주의 민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.

아니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 나중에 보십시오. 이런 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26년의 경험으로 보아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... **양돈**

강원도에서 청정지역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이 글을 쓰는 순간 들려오고 있다. 어느 분이 착각했는지는 몰라도, 생산성이 낮은 농장, 망해가는 농장의 싹쓸이 돼지, 떨어 돼지를 꽤 많이 사오는 곳중한곳이 강원도 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. “오제스키병”도 떨어 돼지에서 발병하지 않았는가!

그럼 발병하면 재원(보상금)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? 도비(道費)로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? 집단,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하며 즉각 소각, 매몰할수 있겠는가?

하여튼 백신 중단 및 콜레라 박멸을 하지 않고서는 일본에 돼지를 팔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. 일본도 아직 지방마다 선택해서 백신 중단을 하고 있다고 알고있다.

7년씩이나 발병이 없다고 하는데, 왜 그랬을까?

양돈수의사회에서는 4월 20~21일 양일간에 걸쳐 일본 돈병수의사회 회원을 불러서 일본의 돈콜레라에 대한 그들의 얘기를, 그들의 입을 통하여 직접 듣고자 초청을 할 계획을 확정했다.

한국의 양돈계의 앞날의 상당부분이 “돈육 대일 수출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.

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을 중단하여 콜레라 박멸에 성공했다 할지라도, -구제역 때문에- 앞으로 발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2002년 5~6월에 가서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수출자체가 가능해 진다.

지금 백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은 구제역 청정국으로

특집 ●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, 문제점은 없는가?